

정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, 6.22) >

◆ “현실과 동떨어진 반지하 이주대책.. 서울 10채 중 9채는 공공매입 불가”

○ 준공 후 20년 이내로 한정된 지하층 주택 매입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

□ 정부는 올해 신청된 3,347호 중 6월까지 8백호 이상 매입심의를 완료하는 등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(신청·접수) 3,347호 → (심의통과) 848호 → (매입완료) 113호, 6.20일 기준

□ 특히, 작년부터 신축매입약정방식*을 활용하여 주택건령과 상관없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.

*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, 약정 조건대로 준공 시 매입·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 반지하주택은 철거 후 신축이 가능

○ 금년부터는 매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이 직접 반지하주택을 매수하여 철거 후 신축하는 공공리모델링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반지하 매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은 LH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,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등 활성화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□ 주택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

○ 국토교통부는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,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부서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중기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부병 (044-201-4533)